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28~11.3)

1 경제일반

1. 일본의 對韓 불화수소 및 맥주 수출 급감

- 주재국 언론은 日 재무성이 발표한 2019.9월 무역통계(확보치) 결과 관련, 對韓 불화수소 및 맥주 수출이 급감했다고 보도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불화수소 수출) 일본의 2019.9월 무역통계(확보치)에 따르면, 對韓 불화수소 수출액은 372만엔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99.4% 급감했음.
 - 수출량은 100kg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다소 회복된 모습이나, 전년동월(3,283톤) 수준을 크게 하회함.
 - (맥주 수출) 일본의 2019.9월 對韓 맥주 수출액은 전년동월(7억 8,485만 엔) 대비 99.9% 감소한 59만 엔으로 전월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특히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식료품 및 의류 관련 제품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2. 태풍 19호 피해 관련 후쿠시마 방사선량 측정기 피해 현황

- 태풍 19호(하기비스) 영향으로 후쿠시마현 내 총 37개의 방사선량 측정기(모니터링 포스트)가 고장 및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함.

1. 피해 현황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공간 방사선량 등을 감시하기 위해 현 내 설치한 측정기 약 3,600개 중 33기에서 고장이 발생했음.
 - 동 기기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日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모든 기기는 지상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측정기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 등이 침수되어 고장이 발생한 것
- 후쿠시마현이 설치한 4기도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입었으며, 1기는 가반형 측정기로 대체를 완료함.

2. 측정기 철거 우려 고조

- 측정기 철거 관련, △ 원자력규제청의 방사선환경대책실 관계자는 ‘계속의 관점에서도 장소를 바꾸지 않고 측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언급했으며, △ 후쿠시마현 방사선감시실 관계자도 ‘복구 방법은 향후 검토할 것. 시정촌의 요청으로 설치된 모니터링 포스트를 철거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설명하는 등 급변 피해를 계기로 측정기가 철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단, 日 원자력규제위가 2018.3월 측정기 철거 방침을 표명한 뒤 이를 철회한 경위가 있는 바, 후쿠시마 주민들로부터 급변 측정기 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
 - ※ 규제위는 ‘공간 선량률이 충분히 낮으며 안정적’이라며 측정기기 2,400기를 2020년도 말까지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으나, 18회에 걸쳐 개최된 주민설명회 및 후쿠시마현 4개 시(市) 및 11개 시정촌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9.5월 ‘당분간 (기기를) 존속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철거를 보류한 바 있음.
 - 상기 관련, ‘모니터링 포스트의 계속 배치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가타오카 데루미 공동대표는 ‘정부 책임 하에 아이들도 생활하는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포스트를 조속히 복구하길 바란다’ 고 주문
 - 고토 시노부 후쿠시마대 준교수는 ‘폐로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방사선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인 후쿠시마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불안을 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 하다면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모니터링 포스트를 철거하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철거한다면 적어도 긴급사태 선언 해

제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고 지적.

3. 日 경제산업성, 태풍15호 대규모 정전 검증 보고

□ 경제산업성은 10.31 태풍 15호(파사이) 영향에 의한 대규모 정전 피해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부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안을 제시한 바, 정부 관계부처는 동 부회의 논의를 검토해 2019년 중 보고결과를 발표할 방침임.

○ 철탑 및 전신주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금번 중간보고안은 철탑 기준을 우선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전신주는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서 지중화를(地中化)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 설비투자를 통한 송배전망을 강화하고, 붕괴 원인을 분석해 구체화하도록 해 비용대비 효과를 배려했음.

※ 현재 전신주 기술 기준은 풍속 40m

○ 쓰러진 나무로 인한 피해 확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바, 전력사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 계획적 벌채를 실시할 계획임.

○ 전력사가 피해상황을 조기 검토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 인력을 최대화하고, 송전선 피해 확인을 위한 드론 활용 및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정보 일체 관리시스템 도입 등도 요구했음.

※ 태풍 15호 대규모 정전 검증 중간보고안 골자

- 철탑 및 전신주 붕괴가 잇따라 발생한 바, 강도 등 기준 수정을 검토
- 피해상황의 조기 파악을 위해 초동 대처 시의 인력체제를 최대규모로 하며, 드론도 활용
- 정보를 일원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 전원차량 배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력사와 지자체, 자위대 등과의 연계를 강화
- 복구비용을 전국 전력사가 분담. 전신주 지중화(地中化)도 추진

4. 일본은행, 추가완화 유예 결정

□ 일본은행은 10.31 실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포워드 가이드(장래 운영 지침, 이하 지침)를 수정해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정책* 유지 및 추가완화 유예를 결정했음.

*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를 0% 정도로 억제

○ (추가완화 보류 결정) 일본은행은 미중 긴장완화 및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 2019.7-9월 회의 당시에 비해 세계경제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내수도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완화 보류를 결정함.

- 구로다 총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추가완화 보류 이유에 대해 '우려가 한층 커지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10.1 발표된 전국 기업경제관측조사(단간) 결과를 감안해 '설비투자는 매우 견조하며, 소비도 완만히 늘어나고 있다' 고 평가함.

- 2019.10월 소비세율 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소매점 매출에서 이전(2014년 소비세율 인상시)과 같은 큰 하락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지적함.

○ (추가완화 가능성 시사) 일본은행은 추가완화를 유예하는 한편, 그간 지침에 '적어도 2020년 봄 정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명기해온 초저금리 기간을 '물가안정 목표를 위한 모멘텀이 꺾일 우려에 주의가 필요한 기간' 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장단기 금리 수준, 또는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상정한다' 는 내용을 명기해 향후 추가완화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추가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유지함으로써 엔화강세 및 주식 하락을 저지하는 한편,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나, 일각에서는 6년 반에 걸쳐 대규모 금융완화 방침을 유지해온 일본은행이 미국 및 EU에 비해 추가완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함.

※ △미즈호증권 관계자 : '지침에 일부러 추가완화를 명기해 추가완화 관측이 시장에 잔존하는 것을 노린 것', △노무라 종합연구소 관계자 : '추가완화 가능성을 시사해 시장의 기대를 컨트롤하는 일본은행의 전략은 막다른 길에 몰려있다'

- 또한, 일본은행이 수차례에 걸쳐 추가완화 방침을 발표한 경위가 있는 만큼, 시장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은행의 정보 발신이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참고] BOJ 추가완화 가능성 시사 표명

일자	내용
4.25(공표문)	정책지침을 수정. '적어도 2020년 봄 정도' 까지 현행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6.20(회견)	물가상승 기세가 꺾일 경우 '주저하지 않고 추가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표명
7.30(공표문)	물가상승 기세가 꺾일 우려가 커질 경우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지적
9.19(공표문)	물가동향에 '보다 주의가 필요한 정세'라고 지적, 10월 회의에서 경제·물가 재점검을 명기
10.31(공표문)	정책지침을 수정. 물가상승 기세가 '꺾일 우려에 주의가 필요한 기간'은 현행의 초저금리 수준 또는 '이를 하회하는 수준'을 상정

- (세계 경기 전망 경계) 금번 회의는 지연되는 해외경제의 회복이 일본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으며, 구로다 총재는 '해외경제 리스크는 고조되고 있으나, 내수로의 파급은 한정적'이라며 낙관적 견해를 표명했음.
- 단, 10.11 미중 간 무역문제 부분합의 관련, 구로다 총재는 '(부분 합의는 1단계 합의에 불과하며) 불확실성이 불식된 수준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오히려 해외 리스크가 지속, 누적되면서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고 덧붙이는 등 경기 전망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음.
- 실제로 2019.9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종합지수) 상승률은 원유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3%에 그쳤으며, '경제·물가 정세 전망(전망리포트)' 은 △2019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을 1.0%→0.7%, △2020년도는 1.3%→1.1%로 하향 조정
- (향후 쟁점) 10.13 발표되는 일본은행의 단간 결과를 통해 소비세율 인상 후의 체감경기 파악이 가능하며, 10.15 미국이 발동을 예고한 제4차 對中 제재관세의 향방도 결정되는 바, 12.18-19 실시 예정인 결정회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2 대외경제 동향

5. RCEP 협상 관련 동향①

- (최종국면 돌입) 한중일 및 ASEAN 등 16개국이 연내 타결 목표로 추진해 온 RCEP 협상이 2019.11월 최종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바, 방콕에서 11.1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에는 가지야마 신임 경산대신이, 11.4 정상회의에는 아베 총리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 ※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0.25 취임 기자회견에서 '협상은 최종국면에 있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리드할 수 있도록 나머지 논점과 각국과의 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
- RCEP 발효 시, 통상 규범 정비 및 관세 삭감·철폐로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해지고 각국 기업은 역내 부품 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은 2018년 수출액 1위인 중국과 3위 한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연내 타결 기대 상승) 對中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30%를 차지하는 인도는 국내 제조업계 및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 RCEP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2018년 협의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관세 분야 양보를 거부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이 셰이프가드 도입 등 인도 측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 간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바, 금번 협상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양보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의 태도 변화 관련, 미중 무역마찰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RCEP을 완성시킴으로써 '자유무역의 기수' 임을 강조하는 한편, RCEP 역내 시장개방을 통해 對美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
- (우려 사항) 2019.10월 말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국가가 등장했으며, 인도는 중국의 원재료를 대량 사용한 제품이 동남아시아 등을 거쳐 인도로 수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지속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본도 관계악화가 지속되는 한국과의 관세협상 마무리에 대한 우려가 여전함.

6. RCEP 협상 관련 동향②

가. 연내 타결 목표

- RCEP 장관급 협의 및 정상회의가 11.1-4 방콕에서 개최되는 바, 참여 각국은 그간 목표로 해 온 연내 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나. 협상 쟁점

- **(참여국 간 입장차)** 거액의 對中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 인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셰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철폐에 소극적인 반면, 일본 및 호주 등이 폭 넓은 분야에서 관세철폐를 요구하며 참여국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 바, 금번 협상에서는 인도가 어느 정도 양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인도의 2018년도 對中 무역적자액 : 약 530억 달러

- 단, 중국으로부터의 저렴한 공업제품 및 농산물의 대량 유입을 경계해 온 모디 총리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방침 전환을 결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
- **(규범 분야)**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높은 수준의 규범 정비에 소극적인 반면, 일본 및 호주 등은 질 높은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등 참여국 간 입장차가 존재함.
- **(한일 관계의 영향)** RCEP 타결을 위해서는 한일 간 합의도 필요하며,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0.29 ‘한국과도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고 언급하는 등 한일 관계 악화가 RCEP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힘.

다. 전망

- 금번 장관급 협의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사퇴한 스가와라 前 경산대신 및 간사이 전력 임원진의 금품 수수 문제와 관련한 국회 대응으로 참석이 어려운 가지야마 신임 경산대신을 대신해 마키하라 히데키 경산대

대신이 참석할 예정인 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RCEP 협상은 그간 타결 목표시기를 수차례 연기한 경위가 있는 만큼, 금번 협상에서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RCEP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지적됨.

7. 칠레, APEC 및 COP25 개최 포기

가. 스가 관방장관 기자회견(10.31)

- **(질문) APEC 관련, 칠레가 2019.11월 하순 APEC 개최를 단념했음. 아베 총리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일본정부의 입장?**
→ 회의 중지는 매우 안타까우나, 의장국 칠레가 현재의 국내 정세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함.

나. 언론 보도

- **(칠레, 폭동 격화)** 반정부 시위 격화로 안전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10.30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질서 및 시민의 안전, 사회 평온의 회복이 최우선’ 이라며 산티아고에서 예정되어 있던 APEC 정상회의(11.16-17, 산티아고) 및 COP25(12.2-13, 산티아고) 개최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함.

- 칠레 정부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치안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시위는 폭동 양상을 보이며 국내 각지로 확산되었음.

※ 시위로 인해 10.28까지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각각 20명, 1,200명 이상이며(칠레 정부 발표), 로이터 통신은 시위로 인한 칠레 경제 손실은 약 14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

- 시위 격화의 배경에는 사회격차 및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는 바, 피네라 대통령은 10.22 국정상의 과오를 인정하는 사죄 연설을 발표해 전기요금 인하, 최저임금 및 연금 지급액 인상 등 사회보장 개혁을 제안하고, 10.28에는 대규모 내각 개조를 감행했으나, 이후에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빚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칠레의 지니계수는 0.46으로 사회불안 경제 수준인 0.4를 상회,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음

- **(칠레, 위신 추락)** 1990년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칠레는 CPTPP 결성을 주도하는 등 경제 기복이 심한 남미대륙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왔으나, 금번 시위 격화에 따른 국제회의 개최 포기로 ‘남미 우등생’ 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함.
- **(각국 일정 재조정 불가피)** 2019.12월 추가 보복관세 발동이 예정되어 있는 미중 무역마찰 관련, 금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무역협상 부분합의 서명식’ 이 있을 것으로 예고되었으나, 양국은 일정 재조정이 필요해짐.
- 아베 총리는 APEC 참석에 맞춰 개최를 모색했던 시진핑 주석과의 개별회담을 연기했으며, 병행 검토 중이던 브라질 방문도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음.

[참고] 중남미 정세 혼란 관련 동향

멕시코	좌파 정권으로 경제 정체
아이티	반정부 시위 빈발
온두라스	반정부 시위 빈발
니카라과	반정부 시위로 사상자 수 백명 발생
에콰도르	시위 영향으로 수도를 일시 이전
페루	대통령-의회 대립으로 혼란 지속
칠레	공공요금 인상으로 대규모 시위 지속
베네수엘라	독재정권 하에 국민 대량 유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둘러싼 혼란 지속
아르헨티나	2019.12월 좌파 정권 부활

8. 미국, 각국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 강화

- 트럼프 정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으로 신고해 우대조치를 받는 국가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표적으로 지목된 중국 및 인도 외, 아시아 및 중동 각국도 대응을 시급한 상황임.
- 부유한 국가가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특별취급을 받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온 미국은 ①OECD 회원국, ②G20, ③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 로 인정한 국가·지역, ④세계무역에 차지하는 비율이 0.5% 이상의 4가지 요건 중 한 가

지라도 해당될 경우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개도국 졸업’ 요건을 WTO에 제안한 바 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9.7월 USTR에 90일 이내에 개도국 지위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한국은 기한에 맞춰 10.25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음.

[미국이 개도국이 아니라고 지명한 국가 및 지역 (※는 개도국 권리 포기)]

조건	WTO에 개도국 자진신고
1인당 GDP 상위 10개국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UAE
G20 및 OECD 회원국	멕시코, ※한국, 터키

- 그러나, 2019.10월 중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이 중국과 인도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도록 재차 요구한 데 대해 양국이 거세게 반발한 경위가 있는 만큼, 각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 바, 미국이 일방적 특별대우 중단 및 OECD 회원권 불인정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노정됨.
-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강화할 경우, 현상유지(개도국 지위 유지)를 요구하는 국가와의 무역마찰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각국은 현상유지와 개도국 지위 포기를 두고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 美 정부는 2019.6월 對인도 특혜관세제도를 폐지, 인도가 보복관세 조치를 발동하면서 대립이 심화, 10.25에는 對태국 특혜관세제도의 일부 정지를 발표.

9. AIIB 관련 동향

- 역대 총재를 배출하고 있는 ADB의 약체화 및 중국 주도를 경계하고 있는 일본은 AIIB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미국과 함께 AIIB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일중 관계가 개선되고 AIIB가 안정적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2019.7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AIIB 총회에는 일본 정부의 고위관료 출신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음.
- ※ 2019.10월부터 AIIB ‘국제자문위원회’에 참여한 가토 다카토시(日 재무성 재무관, IMF 前전문이사, ADB 이사 역임) 및 야마구치 요시히로(국토교통성 출신, 現 해외건설협회 전무이사) 등이 AIIB 총회에 참석
- **(가입국 확대)** 신흥·개도국 및 일미를 제외한 선진국 57개국이 2016년 출범한 AIIB는 2019년 여름 100개국 및 지역으로 확대되어 ADB의 가입규모(68

개국·지역)를 상회했으며, 아프리카 각국이 가입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

니가타	버섯류
-----	-----

- **(시장 신뢰 확보)** AIB는 인도의 교통 정비 등 50건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용자 규모 96억 달러), 신용등급 트리플에이(AAA)를 취득하고 2019.5월에는 런던 시장에서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신뢰를 확보

□ 진리퀸(金立群) AIB 총재는 ‘일본기업도 입찰 및 투자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며 참여를 호소했으며, 일본이 AIB와 어떤 관계를 구축해나갈지는 장기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10. EU,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일부 완화

가. 수입규제 완화 상세

- **(수입규제 완화 일자 결정)** EU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시행해 왔던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 일부에 대해 안정성이 인정되었다며 완화 방침을 2019.6월 日정부 측에 既 전달한 바 있으며, 시행기일 결정을 남겨두고 있음.
 - EU는 지난 6.27 日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 진행된 용커 EU위 원장과 아베 총리 간 회담을 통해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전달한 이후, 10.24 열린 EU집행위원회 국무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채택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11.14부터 완화하기로 한 사실을 10.25 관보를 통해 공포함.
- **(규제 완화 내용)** EU는 금번 규제완화 대상 품목에는 △이와테, 도치기, 지바현 산 모든 품목 △미야기, 군마, 후쿠시마, 이바라키, 나가노, 니가타현산 일부 품목이 포함되며, 동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에 수입시 요구해 왔던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이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밝힘.

<EU가 규제를 완화하는 주요 일본산 식품>

이와테, 도치기, 지바	수산물, 버섯류, 산나물류
미야기, 군마	수산물, 산나물류 중 일부
후쿠시마	대두, 산나물류 중 일부
이바라키	수산물, 버섯류, 산나물류 중 일부
나가노	버섯류, 산나물류 중 일부

- 단,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버섯류, 일부 산나물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바, 일본 정부는 잔존 규제를 완화 및 철폐토록 EU측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임.

나. 언론 평가

- **(피해지역 부흥 효과)** EU 가입국 28개국이 일제히 수입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 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추가 규제완화 기대)** 동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EU가입국 28개국이 일제히 완화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규제를 계속하는 기타 국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됨.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세계 54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도입했으나, 2019.10월 브루나이가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마카오도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철폐 및 완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 10.29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및 지역으로 감소
 -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EFTA 가입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도 포함되나, 日외무성 간부는 ‘EFTA 가입국도 곧 EU의 움직임을 따를 것’ 이라고 언급함.
 -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입규제 도입시에 EU의 조치를 참고한 경위가 있어, 동 규제완화 조치가 현재 수입 규제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이집트 및 아랍에미리트 등의 향후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에 수입규제 완화 촉구 예정)** 규제철폐·완화 움직임에 EU가 합류함으로써, 오히려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이 부각되는 상황으로, 日 외무성은 금번 EU의 결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완화를 촉구할 예정임.